

국회 쉬어도 여야 지도부는 고민 중

한나라 이재오 곤 귀국… 재보선 공천 갈등 우려

민주 정동영 복귀 논란 속 안희정 등 사정 걱정

3월 들어 국회가 휴회하면서 오랜만에 여유를 가져야 할 정치권이지만 여야 지도부는 산적한 당내외 혼란과 당내 세력 판도 변화가 예고되면서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거칠 정치인의 귀환과 4·29 재보선을 위한 공천심사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우선 당내 세력간 핵심부수기 전 개별 4·29 재보선을 위한 공천심사와 당협위원장 교체가 끝나는 감자다. 더욱이 이달말 예고된 이재오 전 의원의 복귀는 당내 세력 판도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문제는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양 진영의 갈등으로부터 비롯된다.

한나라당이 4월 재보선 공천과 관련 가장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 지역은 경북 경주, 친이계 핵심인 정종복 전 의원과 친박계 정수성씨의 '공천전쟁'이 예상되며 때문이다.

또 내달 말 임기 만료와 함께 당원협의회 운영 위원장의 교체가 시작되면 친박 의원들의 복당 지역을 중심으로 원의 당협위원장 재신임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당협위원장 문제가 4월 재보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문제를 재보선 이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논란은 점차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친이계 일각에선 친박 협의원들에게 당협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되, 현재 원의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시 당협위원장 공천과정에서 일정부분 봇을 나눠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중재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 두 문제 모두 현재 미국에 있는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과 이후 행보와 연관돼 있다.

친이계 내부의 권력지향이 바뀔 수 있으며 '적대적'으로 비쳐졌던 친박 진영과의 관계가 재설정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역시 4월 재보선 공천 문제가 '시

한폭탄'이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출마 여부 때문이다. 특히 정 전 장관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당내 386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주류층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 양측 간 정면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민주당의 경우 당 소속 의원 뿐 아니라 참여정부 등 구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곤혹스런 상황이다.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률 유출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와있는 것은 물론 후원인 강금운 창신법 회장, 박연자 태광실업 회장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내에서도 안희정 최고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광재 의원은 해운사로비사건과 관련, 악식기소 됐다. 김재운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민주당은 사정정국이 4월 재보선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나 '표적수사'나 '야당탄압'을 주장하는 외에 뚜렷이 대응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고민이다.

때문에 정세균 대표는 3월 휴회 중 이외의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외출장 자체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법사위와 국방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 출장건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25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린 가운데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디어법 반대 '100일 작전' 나선다

민주, 전국 릴레이 토론회 등 여론몰이 돌입

민주당이 국회내 미디어법 관련 여론수렴 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가동에 발맞춰 대대적 여론전을 위한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인 남은 100일이 미디어법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기간 반대여론을 확산시켜 '6월 국회 표결처리' 부분을 내준 실점을 만회하겠다는 복안이다.

당 차원에서 제1악법으로 꼽고 있

는 미디어법이 6월 국회에서 정부·여

당 안대로 처리될 경우 민주당으로선

거센 후폭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따라서 미디어법 관련

여론수렴에 당의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회 내 논의를 국민위

원회 활동과 국회 밖 대국민 홍보전

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정부·여당

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투트랙 전술'

을 구사하기로 했다.

우선 여야간 대리전 성격이 될 국

민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법안 처리

향배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자당 몫의 위원 선정 작업에 각

별 신경을 쏟고 있다.

미디어법의 문제점을 날낱이 파헤

칠 인사들을 염선, 한나라당과의 논

리싸움에서 기선제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의도 밖에서도 활발한 여론전을

전개한다. 조만간 권역별로 전국을

돌며 릴레이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갖

고 반대 여론몰이에 돌입한다. 정세

균 대표 등 당 지도부도 총출동할 예

정이다.

가두 홍보전, 자전거 전국일주 등

구전효과가 높은 현장밀착형 캠페인

을 준비 중이며 문방위원회들이 전국

시도당을 순회하며 당원교육을 진행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집회 등 장외투

쟁 병행 카드도 시야에 넣고 있다. 4·

19, 5·18, 6·10 등 민주화 운동의 상

장적 기념일을 기점으로 미디어법 저

지 마련된 대회를 개최, '미디어법 통

과 = 민주주의 후회'라는 인식을 부

각시키자는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

다. 민주당은 특히 여야 협상과정에서 미디어법 처리를 양보하는데 반발, 등을 돌렸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관계

를 회복하는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문방위원회들이 지난 6일 언론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달래기

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이를 단체와 접촉면을 넓혀가며 공조체제를 되살

린다는 방침이다.

문방위 간사인 전병현 의원은 8일 "언론악법을 지지할 길은 국민여론의 힘밖에 없는 만큼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한나라당이 여론수렴 결과를 끌어 무시한다면 6월 표결처리'는 원천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진보신당 대표 노희찬씨



다고 밝혔다. 당은 오는 23~27일 찬반투표를 거쳐 차기 대표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진보신당은 지금까지 5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사실상의 재창당을 통해 원내

정당이 된다는 목표 아래 단독대표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유력한 후보 중 한명인 심상정 상

임대표는 이번에 등록하지 않았다.

노상임대표는 8일 "4월과 10월, 내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반드시 의석을 쟁취해 원내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7·9 금 공무원 對備 전문

을 직종 문제풀이 4주 행교세관법 검사 철교보보간 복소기 (영어) 10 기능직

모집인원 100명 미수령

= 각 지방자치 (시행 5월 23일) =

개강 3월 1일 (주) 아동인 모집

• 서울 903, 부산 169, 대구 92, 인천 362, 광주 56

• 대전 101, 울산 80, 경기 605, 강원 142, 충북 155

• 충남 147, 전북 162, 전남 165, 경북 208, 경기 251

• 서울 372, 부산 82, 대구 42, 인천 277, 광주 115

• 대전 78, 울산 42, 경기 273, 강원 179, 충북 118

• 충남 168, 전북 118, 전남 180, 경북 128, 경기 110

• 서울 372, 부산 82, 대구 42, 인천 277, 광주 115

• 대전 78, 울산 42, 경기 273, 강원 179, 충북 118

• 충남 168, 전북 118, 전남 180, 경북 128, 경기 110

• 서울 372, 부산 82, 대구 42, 인천 277, 광주 115

• 대전 78, 울산 42, 경기 273, 강원 179, 충북 118

• 충남 168, 전북 118, 전남 180, 경북 128, 경기 110

• 서울 372, 부산 82, 대구 42, 인천 277, 광주 115

• 대전 78, 울산 42, 경기 273, 강원 179, 충북 118

• 충남 168, 전북 118, 전남 180, 경북 128, 경기 110

• 서울 372, 부산 82, 대구 42, 인천 277, 광주 115

• 대전 78, 울산 42, 경기 273, 강원 179, 충북 118

• 충남 168, 전북 118, 전남 180, 경북 128, 경기 110

• 서울 372, 부산 82, 대구 42, 인천 277, 광주 115

• 대전 78, 울산 42, 경기 273, 강원 179, 충북 118

• 충남 168, 전북 118, 전남 180, 경북 128, 경기 110

• 서울 372, 부산 82, 대구 42, 인천 277, 광주 115

• 대전 78, 울산 42, 경기 273, 강원 179, 충북 118

• 충남 168, 전북 118, 전남 180, 경북 128, 경기 110

• 서울 372, 부산 82, 대구 42, 인천 277, 광주 115

• 대전 78, 울산 42, 경기 273, 강원 179, 충북 118

• 충남 168, 전북 118, 전남 180, 경북 128, 경기 110

• 서울 372, 부산 82, 대구 42, 인천 277, 광주 115

• 대전 78, 울산 42, 경기 273, 강원 179, 충북 118

• 충남 168, 전북 118, 전남 180, 경북 128, 경기 110

• 서울 372, 부산 82, 대구 42, 인천 277, 광주 115

• 대전 78, 울산 42, 경기 273, 강원 179, 충북 118

• 충남 168, 전북 118, 전남 180, 경북 128, 경기 110

• 서울 372, 부